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책임질 국무위원과 차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8·8 개각'으로 발탁된 국무총리와 장관·경철총장·국세청장 내정자 10명이 대상이다. 벌써 8명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국민적 관심은 예전에 비해 시들해 보인다. 여야의 공방 속에 솔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느슨한 검증, 요식행위 절차에 이골이 난 것일까.

느슨한 검증 면죄부 청문회

개각 직후부터 이번 청문회에 이르러까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도덕성 시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단골메뉴가 된 위장 전입을 필두로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에 이어 막말 과동까지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갖가지 추문이 나왔다. 문제없는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는 '종합세트' 수준이었다. 특유의 '그릇론'으로 도덕성보다 업무수행 능력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존중한다 해도 양해할 정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통과의례' 전략한 인사청문회

특히 한때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켰던 위장전입 문제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반사가 된 듯하다. 교육적 목적이었다면, 투기 목적이었다면 사과만 하면 어물쩍 넘어가도 되는 사안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심지어 법질서를 수호하는 치안총수인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말 교육문제 때문에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장전입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반인들은 해마다 수백 명씩 기소돼 처벌

받는데 사회지도층인 각료 후보자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긴다면 청문회가 되며 면죄부만 주는 통과의례가 되는 꼴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엄청난 정치·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천안함 유류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등 잇단 막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비켜갔다. 여당 의원조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을 했다" "청문회가 범죄자에게 경성, 면죄부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

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할 정도였다.

'갑작 발탁'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김태도 국무총리 내정자도 박연차 게이트 연루, 선거자금 수수, 재산증식 의혹 등으로 눈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측은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검증과정에서 스크린 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에서도 내정했다는 얘기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한참 동떨어진 판단이다.

2~3명 이상 낙마를 호언장담해온 민주

당도 청문회 도중 일부 의원이 자리를 뜨는가 하면 무디고 맥빠진 공세로 '부실 청문회'에 한몫했다. '결정적 한방'도 내놓지 못했다.

'공정한 사회' 만든다더니

인사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델로 2000년부터 도입했으니 벌써 10년째다. 하지만,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는 기간 제약이 없어 검증과정이 혹독하다. 4개월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검증시스템도 철저해 문제 있는 후보는 아예 인선하지 않는 탓에 200년간 임명 거부사례가 단 12차례에 그쳤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인 관이오(管仲)는 국가의 네 가지 근본으로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내세웠다. 그런가 하면 다산 정약응은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정치인의 제1 덕목으로 '청렴'을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정치 선진화'를 새 화두로 던졌다. 그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법·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을 '엄찰마속'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길이다. 문제가 드러난 내정자들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다.

<경정부장> who@kwangju.co.kr

시 설

LH 업무 차라리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118조원의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상경영상에 돌입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은 미루는가 하면 서민주택 안정을 외면하고 협력업체 위 어져가게 나서 지역민과 지역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LH 부실·방만 경영의 불통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꼴이다.

LH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광주·전남 공동산단지 '빛그린 산업단지'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01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산단 조성 자체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산단에 편입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역시 LH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성토를 못해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LH 경영난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마저 앗아가고 있다. 화정 2, 지원 3, 동명 2지구 등 광주지역 주거환경개선사

업이 중지됐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휴천 1지구 등 택지개발사업도 연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LH의 발주물량 감소와 원가 감소로 지역 중소기업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LH의 방만 경영의 피해가 지역경제와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 LH의 부실 경영도 한 원인이지만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선심성 정책과제를 무리하게 떠넘긴 책임도 크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공기업에 지우는 구태가 빛은 결과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LH 사태에 적극 개입해 사업 계획 변경이나 중단, 철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별도의 지역별 조정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차체에 경영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LH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재고해야

정부가 '2010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설비 등의 투자확대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에 기업이 설비 등에 신규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지방부조 활성화 제도로, 지난 1982년에 도입됐다. 수도권 과밀화로 날로 쇠퇴하는 '지방 보호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발상은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열악한 사회기반과 투자환경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을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 제도마저 없어진다면 어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겠는가.

이 제도 폐지로 1조5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수 1조9천억 원의 78.9%에 해당한다. 최근 4대강 사업 등 각종 대형 사업 등으로 어려워진 정부의 재정을 지방을 쥐어짜 메우겠다는 속셈인 셈이다.

정부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을 위해 새롭게 고용하는 인원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청년 1인 고용 시 1.5명으로 계산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것이 과연 얼마나 고용을 늘릴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고용창출을 염두에 뒀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연장과 고용 증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안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지방경제가 살아야 고용증대가 이뤄질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다.

은핀칼럼

심 상 돈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다면, 진료실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진료를 방해하는 여타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호 장치가 있을까? 답은 '아닙니다'이다. 병원 내에서의 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온다. 모 대학병원의 교수는 심지어 회진 중에, 개인병원의 의사는 퇴근 길에 폭행을 당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실 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했다. 응답자의 69.1%가 '스트레스·두려움·무기력· 분노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답해 폭력 피해의 후유증이 다른 환자의 진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의 발달로 이러한 상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허거나, 진료실 주변에서 고성 등으로 역지를 부리며 진료를 방해

기 고

김 채 흥



최근 유명 연예인이 전남에 사업의 동지를 틀어 화제다. 지난 6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장에 회사 대표로 참석한 사람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여성이 한 명 있었다. 그가 바로 연예인 이영심씨다. 이씨는 탤런트, 스포츠 사업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워우먼이다. 연예계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CF모델로 발탁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7080세대라면 누구나 있을 수 없는 새우장 CF가 대표작이며, TV 드라마 '내일은 사랑' 등에서 발군의 연기력을 선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하먼 은회사가 연상될 것이다. 청량하고 가냘픈 목소리로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그도 전남에 정착했다. 함평군 손벌면 산남리 교촌마을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민예학당'이란 팻말을 세운 곳이 그의 보금자리다. 그가 이곳에서 기타 대신 잡은 것은 천연 염색 솜이다. 제주출신인 그가 고향도 아닌 함평으로 옮겨오게 된 이유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충남 서산에서 완도 보길도까지 서해안 일대를 6개월여 동안 살살이 뒤진 끝에 이곳을 찾아냈다고 한다. 해풍이 불어오는 바닷가로부터

유명 연예인이 전남에 동지 틀까닭

이러한 유명 탤런트가 전남에 투자를 결정할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라도 보내 투자처를 물색하고 투자상담을 할 때부터 과연 투자를 할 것인지, 왜 고향도 아닌 전남에 찾아 온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궁금증은 투자협약식장에서 풀렸다. 그는 인사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사업지역을 물색했는데, 전남이 가장 공기가 맑고 청정지역이며 우수한 농산물이 풍부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30대의 유명 탤런트가 전남지역에 사업의 동지를 틀 것도 놀랍지만 그의 사업 포부가 관심을 끌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김치산업을 '청아채'라는 브랜드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전남지역에서 생산하는 품질 좋은 채소로 김치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청아채'라는 브랜드를 본인이 직접 CF 모델로 출연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꽃단지 끼고'와 '사랑해'를 부른 가수

터 1km 미만인 데다 일조량도 풍부하고 기후도 온화해 농사가 잘되는 곳이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광에 마음이 이끌렸다고 한다. 지금은 사업의 꿈도 결실을 맺으면서 국내외의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이다. 일본, 유럽에서 순회전시회를 여는 등 블루진을 압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의류 '코리아 브라운진'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두 유명 연예인이 전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말대로라면 여심을 움직인 가장 큰 요인은 다른 지역보다 온화한 기후, 청정지역, 풍부한 자연,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다. 전남의 숨겨진 보석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해양관광자원과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산물과 청정수산물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훌륭한 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고, 풍부한 일조량과 경제성 높은 바닷바람, 빠른 조류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다. 두 연예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기업인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전남의 매력을 찾아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전남도 기업유치과장>

가족력 질병 있다면 건강검진 10년 일찍 받아야

건강을 지키는 첫째 요건이 운동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운동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가족의 질병내력, 즉 가족력을 파악해 미리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의 선천 중 질병이 있었을 경우 그것이 후대에 전해질 확률은 당뇨병은 1.7배, 유방암은 무려 8배나 발병위험이 높다고 한다.

중증에서도 당뇨병은 가족력이 가장 확실한 질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부모 가운

데 한 사람이 당뇨병 앓았다면, 자녀들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암도 역시 가족력이 뚜렷한 질환으로 꼽힌다. 정상인보다 유방암은 8배, 폐암 7배, 대장암은 5배나 발병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 발병의 연령도 더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집안에 가족력 질병이 있다면, 남들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일찍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공무집행 방해와 진료실 폭력

개인병원일수록, 진료의 결과가 부정적 일수록 그 빈도 및 강도는 강해진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약 90%가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의사들로 구성된 의학 전문의의 여론조사 전문패널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진료실 등 병원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개원의(84.2%), 교수(83.3%), 봉직의(90.0%), 전공의(83.3%) 등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높게 나왔다. 폭력을 경험한 횟수는 '연 1~2회'가 52.7%로 가장 많았다. '월 1회 이상(5.5%)', '거의 매일'(1.8%)이란 응답도 있었다.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2.7%의 응답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맞선다'고 답했으며 '참거나 무시하고, 자리를 피한다'는 응답(31.8%)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에 비해 '경찰에 신고한다'(19.1%),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11.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대다수의 의사들은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

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환자·의사 관계는 약이나 수술 등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의사와 환자의 인간적인 교류가 중요하며 치료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최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느 정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의과대 학생시절 진료실 폭력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배우는 하지만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보호방법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9.1%가 '취지에 공감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답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3.6%나 돼 상당수의 의사들이 진료실 폭력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에 공감할 수 없거나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아직은 병원 내 폭력행위에 대해 의사 개인이 모두 떠안고 있는 현실이며, 이를 개선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동아병원 원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예술품 가운데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像)'이 이탈리아 정부와 피렌체시(市)간의 소유권 싸움에 휘말렸다고 한다. 피렌체에 전시돼있는 다비드 상의 소유권이 이탈리아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피렌체시에 있는지 싸움의 골자다.

이탈리아 정부는 '피렌체공화국의 법적인 계승자는 바로 이탈리아 정부이며, 따라서 피렌체시에 전시된 다비드 상도 이탈리아 정부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렌체시는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가 됐을 때 피렌체 베키오공전에서 서명한 협정에 따르면 다비드 상은 피렌체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비드 상은 지난 1501년 피렌체대성당의 지도자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해 제작한 대리석상으로, 소년영웅 다비드가 적국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갈 때로 쓰러뜨리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26세였던 미켈란젤로는 불후의 명작 '피에타 상'을 만들어 낸 뒤

공바로 다비드 상 제작에 매달려 3년 만에 높이 5.49m의 거대한 다비드 상을 완성해냈다.

다비드 상이 제작된 당시의 피렌체가 사실상 독립적인 도시였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결론엔 작품이 이탈리아 안에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될 성싶지는 않지만, 소유권 논란의 실상이 '한 해에 1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관료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더 나아가, 실제 식민시절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때문에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히 한 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조선 왕조의 전례시인 '조선왕실의계' 등을 한국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정부의 비드가 적국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갈 때로 쓰러뜨리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26세였던 미켈란젤로는 불후의 명작 '피에타 상'을 만들어 낸 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012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국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사 팀 2200-685	기 획 사 업 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